

오피니언

시설

평동 외국인산단 '임대료 폭탄'이라니

광주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들이 시름에 젖어 있다고 한다. 지난 2000년 입주 초기만 하더라도 저렴한 임대료 덕에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 임대료를 2년 연속 20% 이상 올린데다 임대보증금도 최대 10배 가량 인상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부는 지난해 7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해 임대보증금을 대폭 인상했다. 이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했던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평동은 m당 93원)를 일반산단 입주기업에 적용하는 임대료(공시지가의 5% 수준, 평동 m당 706원)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이후 임대계약은 갱신(10년마다)한 10개 입주기업은 임대보증금이 2.8~10배 올랐다. 지난해 4월 임대계약을 갱신한 H사는 임대보증금이 2158만 원에서 1억1664만 원으로 1000%나 인상됐다. 임대보증금 폭탄은 나머지 50여 개 입주업체도 계약 갱신 시기에 따라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임대료도 매년 20% 이상인 상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0년 연 2495만 원이던 K사의 경우 임대료가 올해 3683만 원으로 2년 사이 47%나 급증했다.

문제는 정부가 입주기업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는데다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20%씩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천안·구미 등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입주기업들이 이에 대해 기업외 명목으로 전액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는 애초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산단을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료 등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형평성을 내세우는 건 사실상 기업을 내쫓는 꼴이다. 정부는 조성 당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안전불감증이 낳은 수돗물 오염사태

지난 5월 광주 용연정수장에서 발생한 수돗물 오염사태와 관련, 경찰이 정수사업소장 등 공무원 8명과 공사 관계자 4명 등 총 12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일부 공무원의 직무태만 사실을 적발하고 광주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수사를 피온 경찰이 책임 규명을 하지 못한 채 내사 종결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 동부경찰은 3일 약품탱크 누출액 방지벽 공사를 감독하는 직원이 문제의 밸브가 쉽게 열릴 수 있는데도 안전지도나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밸브 위치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치를 아는 직원은 전체 65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수질 오염이 우리에게 된 보탬이 기준도 낮게 설정해 밸브가 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점심때 모두 상황실을 비우는 등 모니터링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보원이 울린 뒤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휴일 비전문가들이 당직 근무를 하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해당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이 화를 불렀다. 공사 감독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안전지도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초기 대처마저 이렇게 엉망이었다니 예견된 사태 내사 종결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계다가 공무원들은 작업 인부들이 밸브를 건드려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덮어 씌우고,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산성성분의 응집제가 10배 이상 초과 투입됐지만 공급시간이 짧으니까 일시적이어서 인체에 해가 없다"고 허위 발표하는 우(無)마저 보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오염된 수돗물을 마시고 일부 시민들은 피해보상마저 요구하고 있는 마당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정수장 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데스크시각

정기태



'무대뽀'라는 게 있다.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경상이 사투리로, 어원은 일본어 '무뎨포'(無鐵砲)。 무대뽀의 특징은 남의 사정 따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뒤 생각 없이 덩비는 것이다. 막무가내나 내대목이, 뭇방지기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 '막무가내'라는 순화된 고유어가 있지만, 전달하는 메시지나 어감(語感)이 달라 널리 쓰이는 말이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막 이후 광주시가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 논란을 지켜보면 서 필자는 무대뽀라는 왜색(倭色) 짙은 단어를 떠올렸다. 행정이 합리적 절차와 순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중심적 생각이 발단

광주시는 엑스포 셔틀버스를 관광회사에 맡겨 하루 두 차례 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버스가 전남도로부터 한정명허를 받지 않고,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도 벗어났다는 점이다.

9600원.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5월 12일 엑스포 개막 이후 한 달간 6200만 원의 손실을 입었고, 폐막 때까지 총 2억 여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가 특정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정작 다른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불만소이다. 조합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광주시와 해당업체를 고발했으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국에 "반응이 좋아 답장 운영을 중지할 수 없다" "국가적 행사이니 성공 개최를 위해 조정이 양보하라"는 문리는 불평사이다.

'무대뽀'와 '곤조'

했다. 대책비 중 일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였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충분한 대책 없이 추진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시·군 제향으로 직불금을 집행하고, 전남도는 고발을 취하려는 선에서 일단락됐지만 생채기는 깊었다.

광주시내 사학과 교수는 2013학년도 고교 배정방식을 둘러싸고 시 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웠다. '사립학교 선호 현상을 바로잡겠다'며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배정하려는 '진보 교육감'의 정책이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본질은 위변하고 겉가지만 손질하려 한다"고 줄곧 반대해왔다. 교육청 측은 3개월만 이달 초에야 뒤늦게 백기를 들었다. 일선 고교의 자율학습을 통제하는 현 지침도 '학교 자율권 침해 → 성적 하락 →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을 낳는다면 학부모 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합리적 절차와 순리 지켜야

앞서 열거한 사례는 무대뽀 행정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사전 이견을 조율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안을 일방통행으로 처리해 야기된 불협화음이다. 파열음이 발생하면 행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제때 주지 않는 '곤조'(根性)도 부린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기는커녕 "배째라"고 버티거나 꼬투리를 잡아 성깔 부리며 웅변하는 무대뽀와 곤조는 사실상 동일선상을 걷는, 이름동의어(異音同義語)인 셈이다.

무대뽀와 곤조가 상존하는 조직이나 집단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잘못된 폐해를 적절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하여, 묻는다. 당신은 혹 무대뽀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곤조를 부리지는 않는가? 曷-

〈편집부국장〉 meonsan@kwangju.co.kr

은편칼럼



최영태

1980년~90년대는 한국에서 학생운동이 최절정기에 달했던 시기이다. 전국 규모의 집회가 열릴 때는 10만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그 조직력과 열기가 강하고 끈기 있었다. 이 시기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들, 특히 전남대는 전국 학생운동의 중심에 위치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90년대에만 전국 학생운동 조직인 전대협과 한총련 의장을 세 차례(1990년, 1996년, 1997년)나 역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이 시기 대학생들은 정치적 민주화 및 민족문제 외에 노동자, 농민 문제 등 민중과 사회민주화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젊은이들의 이상주의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

12월 대선과 지역균형·지방분권운동

나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지방대생들이 자신들의 문제인 지방대 문제에 너무 무관심했던 점이 특히 그러했다. 민주 사회는 기회와 공정성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지방대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등에서 능력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나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때 학기 강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지만 그 어떤 해에도 전남대 총학생회가 이런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지방대생 문제는 민주주의나 통일 문제, 혹은 노동자·농민문제 등과 비교할 때 너무 사소한 혹은 지역적인 문제라고 판단해서였을까? 현재 지방 명문대들은 거의 사라져 버렸고,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충원문제, 학생들은 취업문제로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만약 이 지역 학생들이 지난 시절 지방대생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누리당의 경우는 대선후보가 사실상 박근혜 의원의 문제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대선에 내놓을 정책마련에 고심하는 국민인 것 같다. 민주당의 경우는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 돌입했고, 여러 명의 후보자들이 경쟁에 나서면서 그 열기가 뜨겁다. 경선에 나설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주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은 담대로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새

선적인 주제는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달리 지방, 특히 이 지역의 상황이 너무나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 토대를 둔 기업의 우대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 지방정부의 권한 및 지방재정의 강화, 지방대의 육성 등이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들의 핵심 공약이 되도록 만들자. 지난 시절 이 지역 학생운동이 정착 지방대생 자신들의 문제에 소홀히 대처한 결과가 어땠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자. 경제인, 언론, 시민사회, 대학 등 각 주체들이 모두 나서 어떤 정당, 어떤 대선 후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진정성을 보이는 지를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자.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직접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압박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지역균형 발전은 한국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로,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코스라는 인식하에 이 문제에 보다 당당하게 대처하자.

〈전남대 교수·역사학〉

기고



신덕찬

최근 광주지역에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식중독 지수가 50~85를 기록하는 등 식중독 '경고'단계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식품의 취급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열 여름은 강우량이 많고 고온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7~9월의 식중독 발생 급증이 예상되고 집중호우 침수지역의 오염된 지하수나 야채류 사용 등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방학 전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식중독예방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여름철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장마 후 야생독버섯 섭취사고 등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식중독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대장균이 상위를 나타내고 있다. 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대장균은 사람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육류, 어패류 등에 존재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충분히 가열·조리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고 나서 실온에 음식을 보관한 뒤 재가하는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고온의 날씨 속에서는 4시간이면 세균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증식되고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 기본수칙

준수는 필수적이다.

WHO(세계보건기구)도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09년 9월 30일 '식품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5가지 열쇠'를 제정했는데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첫 번째 강조 사항은 '정결유지'다. 손 씻기를 비롯하여 도마, 칼 등 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정은 물론 소독, 방충 등을 통해 병원균이 식품에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생식품과 가열식품을 구분'하는 것으로 도마, 칼을 용도에 따라 구분 사용하고 식품은 재료별로 나누어 취급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열'이다. 조리가 끝난 식품도 다시 가열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

이다. 모든 음식은 적당한 보관 온도가 있다.

다섯 번째는 '안전한 물과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기한이 지난 것은 먹지 않도록 하고 야채나 과일 등 생식류는 잘 씻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중독은 예방만 잘해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치구와 함께 식중독 없는 건강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식중독 예방 기본수칙 준수 등 시민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단체급식소와 위생업소의 점검 등 전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활동과 안전한 식생활을 유도하며 경찰청 식품 유통구조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각자의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의 정착이다. 손 씻기와 안전한 음식물 섭취 등 일상 속에서 위생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지켜가길 바란다.

〈광주시 식품안전과장〉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 만들자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고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근절시킨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이게 쉽게 수그러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을 발본색원해서 처벌하거나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은 송광량이 처벌보다는 더는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요즘에는 아주 심하게 때리거나 못되게 괴롭히기보다는 한 학생을 비난하고 비웃는 등 은근히 괴롭히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은 이를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점이다.

있었다.

피해 학생들은 일단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괴로워도 형이하지 못한다. 그런 와중에 가해자들은 흥분없이 놀리고 괴롭히면서 피해자를 힘들게 한다. 이런 일을 겪은 피해학생은 고통을 혼자 감내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핵가족화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남을 배려하는 의식이 부족하고, 특히 학생들은 피해 신고를 하거나 학교에 알

려 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한다는 것은 피해 사실 신고 후 학교나 사법당국의 처벌과 처리가 미흡하기 때문 아닐까. 즉 벌거 아닌 정도라고 치부해 버리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막으려면 가해학생들이 죄의식을 느껴야 하고, 피해 사실 신고가 있으면 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와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처리해줘야 한다.

▲노은영·목포시 석천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等鼓

삼국유사에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다문화 가정 이야기가 씌어있다.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과 인도 아유타(阿踰陀)국의 공주인 허황옥(許黃玉)이 주인공인데, 서기 32년에 태어난 허 황후는 열여섯 나이에 배를 타고 와 왕위에 오른 지 7년 된 수로왕에게 시집을 왔다고 되어 있다. 한국 남성과 인도 여성과의 국제결혼인 셈이다.

삼국유사는 '가락국기'에서 약 400자의 한자로 허 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그녀는 서기 48년 5월 부왕의 명으로 붉은 돛을 단 배를 타고 아유타국을 떠나 7월 28일 가락국에 도착했다. 처음엔 거센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고 되돌아갔는데,

공주를 직접 맞이했다. 이에 공주는 비단고개에 올라 자신의 비단속옷을 벗어 폐백의 뜻으로 산신령께 드리고 수로왕에게 갔다.

이후 허 황후는 157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열 명의 왕자와 두 명의 공주를 낳았다고 전해진다. 10명의 아들 중 둘째와 셋째는 석(錫)과 명(明)인데, 이들은 어머니의 성씨를 물려받아 김해 허씨(金海許氏)의 시조가 됨으로써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가 같은 조상의 자손이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이들의 후예인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가 전 국민의 9% 수준인 450여만 명이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결혼으로서는 대단히 성공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설화(說話)라고는 하지만, 허황옥과 수로왕에 관한 이야기는 예로부터 우리가 배타적인 민족이 결코 아니라 단일 민족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준다. 조금 시야를 넓힌다면, 다문화 가정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민호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등공보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경 부 2200-612	제 육 팀 2200-697	(F A X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